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

김 남 식  
(통일문제연구가 / 작고)

## 머리말

민족이 분단된 지 55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 정상간의 회담이 이루어져 7.4성명의 3원칙 정신(민족논리)이 반영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는 분단 극복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그릇된 인식,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했다. 이제부터 남북 사이에는 불신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정상회담은 내적인 요인과 여건의 성숙에서 ‘올 것이 온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분단을 강제하고 있는 외적 여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본 것이다.

## 1. 한반도의 기본문제

한반도는 민족 내부의 문제와 함께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것은 남과 북이 이념과 제도상에서 상호 모순(대립)관계에 있다는 것과 우리 민족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외세와의 모순관계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모순 중 남북간의 민족 내부 모순은 상용적(相容的) 모순, 다시 말

해서 화합이 가능한 관계이며 우리 민족 대 외세와의 모순은 적대적(敵對的) 모순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세와의 적대관계란 그를 좁혀서 단순화시켜 보면 군사분계선으로 대치상태에 있는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관계를 의미한다. 언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근 반세기 동안 지속돼 오고 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선차적이며 기본적 과제로 될 수 밖에 없다. 남과 북간의 대립은 그 성격이 상용적인 것으로서 한반도 문제에서 이차적 과제로 되며,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먼저 해소되고 민족 내부 문제에 간섭이 배제되면 우리 민족은 이념과 체도를 초월해서 민족 단합을 할 수가 있고, 그를 기반으로 양 체도를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통일국가를 창출해 낼 수가 있다.

요컨대 한반도의 기본문제는 우리 민족 대 외세와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인민군과 미군이 관리하는 군사선으로 인해 민족의 분단과,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불행과 고통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해결 없이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 북·미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미 구축된 화해와 협력 관계는 일시에 무너지고 만다. 이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기도 하다.

## 2. 한반도 기본문제와 정상회담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한반도의 기본문제이기 때문에 그를 축으로 비유한다면 북·미 관계가 기본축이 되고 남북 관계는 이차적인 것으로서 보조축이 된다. 이 두 가지 축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기본축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보조축이 작동되며, 보조축이 크게 움직이면 기본축의 가동에 큰 영향을 준다. 남북정상회담도 이러한 축의 원리에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미 당국자 회담만이 진행되고 남북간에는 당국을 배제한 비당국자 회담과 교류만이 있었는데 정상간 회담을 함으로써 보조축의 가동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바로 북·미관계라는 기본축의 가동을 한 계단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본축인 북·미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그것이 남북정상회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1994년 10월에 합의한 북·미간의 기본합의서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미국은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핵문제 외에 미사일 문제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이며 단계적 방식인 이른바 페리보고서에 근거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서를 원만히 실천만 하면 북·미 관계는 적대관계로부터 평화적 공존의 길로 발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페리 구상에 따른 한 차원 높은 고위급회담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간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미사일 개발은 한·미·일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정책이라는 것, 또한 미사일 수출 문제는 외화획득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에 따른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과 함께 미사일 문제까지 포함하여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른바 혜택과 보상을 하며, 거부할 때에는 제재를 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재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 **단기** :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유보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일부 해제, 한국과 일본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 **중기** :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계획을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는 것.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관계정상화.

- **장기** : 한반도의 냉전종식.

북·미 관계는 이 세 단계 중 첫 단계의 목표는 지난해 9월 이미 실행된 상태이며, 지금은 중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북·미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기 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북·미간의 관계는 평화적 공존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면서 북·미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전제로 한 한 차원 높은 고위급회담에도 응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규정하고 있는 테러지정국으로부터의 해제, 경제제재 조치의 완전 해제 등의 전제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에 개최된 바 있는 베를린회담과 금년 3월의 뉴욕회담, 그리고 지난 5월 로마회담 등에서는

북·미 기본합의서의 실천에 관한 문제와 함께 페리 권고안에 따른 한 차원 높은 고위급회담 개최 문제가 토의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5월 로마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진지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전이 있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할 실정에 있다. 그 하나는 국내문제로서 페리 권고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 의회의 대북 강경파의 주장을 억지시키고 의회의 동의와 초당적인 뒷받침(예컨대 북한의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얻어내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서 일정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른바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진전이 있어야만 된다. 또한 국내문제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그가 임기 중에 벌여 놓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또는 최소한 해결의 가닥만이라도 잡아 놓아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는 금년 말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는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는 1994년 4월 10일 북·미 기본합의서에서도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페리의 대북정책 권고안은 한·미·일 3자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인만큼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만 진행되고 있을 뿐 당국간 회담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국이 페리의 구상안을 진전시켜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관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게 남북 당국간 회담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클린턴 행정부는 금년 들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보조축의 가동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정상회담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의 성공을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정상회담도 당연히 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따라서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하여금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토록 한 것이다. 한편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한·미·일 3자 공조체제의 일각인 남한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

써 한반도의 기본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회담을 진전시키며 또한 북·일 수교회담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남한으로 하여금 7.4성명의 통일의 3대 원칙을 수용케 하여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통일의 기초가 되도록 확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유훈’을 실천하는 것으로도 된다.

셋째, 미군 주둔과 국가보안법 존속 명분을 없애고 민족대단결을 통한 통일역량을 확대 강화시킨다는 것.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이 북·미 회담이라는 기본축을 한 차원 높여 가동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보조축(남북관계)의 극대화된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한 집념이 합치된 것이다.

### 3.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지난 4월 8일의 정상회담 합의 후 5차에 걸친 실무접촉을 통해 6.13~15 김대통령 평양 방문이 실현되었다. 방문 기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봉,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확대회의(최고위급회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단독회담)이 있었다.

회담 의제는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6.14 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15일부로 공표했다.

공동선언은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섯 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1.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2. 연방제 방향으로 통일
3.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4. 경제협력, 다방면적 교류협력
5. 당국간 대화 개최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

여기서 남북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첫째, 7.4성명의 통일의 3원칙인 민족의 논리 반영**

공동선언은 계급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자본주의 논리를 초월해서 민족논리로 일관되어 있다. 특히 4항에서는 남북이 협력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경제는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발전되고 운영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의 사회주의경제와 남의 자본주의경제를 민족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서로 보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5개항 중에서 1, 2항의 통일에 관한 것은 주로 북한의 입장이, 이산가족, 경제교류, 당국간 회담 등은 남쪽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임기 중에는 통일은 뒤로 미루고 남북간의 경제교류 등을 통해 공존공영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경제교류의 활성화(지난 3월 베를린 선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정치, 군사문제부터 접근을 하려는 입장이며 김대중 대통령과 환담하는 자리(13일 오후 1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 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한 의문부호다. 2박 3일 동안 대답해야 한다”라고 말해 평양상봉이 정상들만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 즉, 통일이라는 근본문제 합의에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 **둘째, 통일과 평화 문제의 분리**

선언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문제가 빠져 있다. 이는 통일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평화문제는 북·미간에 회담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상회담의 의제에 군사문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예상했던 문제이다.

### **셋째, 통일방안이 연방제 방향으로 접근**

선언은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연방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제’라는 것은 주로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

남북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 두 개 국가의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군대와 외교권을 가지면서 남북연합이라는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그리고 2단계는 연방국가의 단계이며 3단계는 단일 국가의 단계이다. 따라서 연합제는 제2단계인 연방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다. 그리고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종래의 연방제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초기에는 대폭 축소하여 지역정부에 국방권과 외교권을 가지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경제 분야의 조정자 역할 또는 중요한 국제문제에서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며, 하나의 연방국가라는 지붕 밑에서 남과 북을 지역정부로서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주석은 신년사에서 통일의 방도로서 1민족 1국가 2제도 두 정부를, 그리고 초기 연방국가의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법의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그 후 통일관련 책임간부들의 말을 통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80년 10월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제시된 연방제안은 외교, 국방권을 처음부터 중앙정부가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7.4선언의 3대 원칙을 통일의 기초로 삼고 통일 지향적 공존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통일국가는 국가연합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연방국가의 틀 속에서 남과 북은 얼마든지 공존공영을 할 수가 있다.

#### **넷째, 공동선언의 무게와 신뢰성(실천성)**

이번의 공동선언은 종래의 특사 또는 총리가 합의한 것과는 달리 남과 북의 정상들이 장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결과이며 또한 온 겨레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무게가 있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실천이 담보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간 남북이 합의한 7.4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다음 대통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험으로 보아 이번의 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계승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전망**

### **첫째, 3대 원칙이 통일의 기초로 확정**



그간 남한에서는 7.4선언의 통일의 3대 원칙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계속 견지해 왔으며 사회주의 헌법에서까지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의 3대 헌장의 하나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의 3대 헌장이란 7.4성명의 통일의 3대 원칙과,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뜻한다.

평양에서는 금년 8.15를 계기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건립키로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범민련 남·북·해외 3자 회의에서 기념탑을 전민족적 통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오래 전에 파기한 3대 원칙을 이번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만약 3대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4차 실무접촉(5월 8일)에서 의제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접촉 날짜도 잡지 못했는데, 그날 밤 북측은 방송을 통해 “우리측은 남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이며 융통성 있는 안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다음 접촉은 남측이 우리의 융통성 있는 안을 긍정적으로 대할 용의를 가지고 우리측에 날짜를 통지하는 데 따라 갖기로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의 남북공동선언은 7.4성명의 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 통일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3대 원칙이 통일방안과 실천에서 기준과 기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 **둘째, 전쟁 종식의 촉진**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다. 휴전선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인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파괴된 지 오래이며 군사적인 힘의 균형으로 휴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상에서 근·현대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한반도처럼 근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지속된 경우는 없다. 미국은 하루속히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6.25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다.

김 대통령은 공항 도착 인사에서, 앞으로 남북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6월 15일 오전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게 “휴전선이고 어디서고 남쪽을 비방해서는 안된다”며 “실사 남쪽이 먼저 비방을 하더라도 따라서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쪽이 비방방송을 중지한 데 따라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는 ‘괴뢰군’을 ‘북한군’으로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이처럼 남과 북은 군 내부에서까지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명분에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최근 휴전선을 가로질러 경의선을 복원하고 금강산 철도를 건설하며 비무장지대 내에 북한과 거래하는 물류센터를 건설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군사분계선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화석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골수 보수파인 헬름스 미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이 6월 16일 CNN의 정치토크쇼에 출연해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할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휴전 상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셋째, 국가보안법 존속의 명분 상실**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이며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퇴물의 하나이다. 그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운동들이 전개돼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남북간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앞으로 다방면적인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실현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더이상 존속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정부는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를 적극 추진하고 개폐 전까지는 법의 적용을 탄력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철회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두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만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일부 있으나 이번 기회에 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자주와 3자 공조간의 갈등**

공동선언 제1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공동선언 5개항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한·미·일 3자 공조체제하에서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3자 공조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것이며 북한의 핵 문제가 크게 부상되자 3자

공조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되었다. 지난해 4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대북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3자 조정 및 감독 그룹’을 만들었다. 이에 관해 해당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서 제도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협상지침을 내고 이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인 페리 구상도 미국 주도의 3자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3자 공조라는 틀 속에서,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별개의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분석을 하게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김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5월 7~9일 서울을 방문한 3자 공조의 미국측 책임자인 셔먼(국무부차관)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그는 출국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와 목표가 더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미 공조를 통해 협의해 온 사항들이 적절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6월 8일 동경을 방문한 클린턴 미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한·미)의 관심사항에 대해 김 대통령이 잘 다루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을 방문한 일본의 모리 총리는 5월 29일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북·일 수교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과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한다.

미국 주도의 3자 공조와 관련해서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김 대통령이 서울도착 후 클린턴 대통령과 모리 총리에게 정상회담 결과를 전화로 설명하는 한편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황원탁 외교안보 수석을 미·일에 보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토록 했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제네바합의 등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현재 북·미간에 미사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협상을 성공시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설명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는 다음에 우리의 조치가 무엇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이 될지 결정하기 전에

김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 주도의 3자 공조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럴 경우 공동선언에서 밝히고 있는 자주 문제와 상충되는 것이며 따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자주’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의 3원칙에서는 자주 원칙을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6월 16일)에서 김 대통령이 발언한 자주는 다음과 같다.

“북쪽에서는 자주를 특별한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했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면서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지내면 우리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주인 것이다. 과거에는 자주가 외세를 배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 내용으로 볼 때 김 대통령은 한·미·일 3자 공조는 통일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은 주변 4강, 특히 미·일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남북한 통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과소 평가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 주도의 3자 공조라는 틀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실현되지 못한 기본 요인은 미·일의 간섭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한은 남쪽에게 3자 공조체제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반면 미국과 일본은 남한 정부에게 3자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현재 자주와 3자 공조라는 상충관계 속에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맺는 말

앞으로 북·미 관계는 한 차원 진전될 것이며 북·일관계도 이에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현실적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진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8일 동경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과 북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통일지향적인 공존공영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통일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통일의 주체는 반통일 세력을 제외한 우리 (남북) 민족이다. 통일의 주체를 강화함이 없이 공동선언을 실천할 수가 없다.

특히 4강은 한반도의 두 개 국가 현실화를 바라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득권 세력들은 통일보다는 공존영구화를 원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붕괴를 또는 흡수 통일을 원하는 세력들은 지금에 와서는 평화공존의 영구화로 변신하고 있다. 앞으로 자주적 통일 과정에는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것이다. 통일은 그 주체의 역할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진리를 간직하고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 성원들로 하여금 상실된 민족의식과 애족의식을 되찾고 통일의식의 소유자로 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사월혁명회보 제57호(2000.7)